

중소기업 대표 141명이 직접 매긴 첫 중기부 수장의 성적표는?

“노동현안 대응 미흡, 수호천사 역할 못해” 53점 낙제점

중기부 정책 관련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46%가 ‘불만족’ 나타내

중소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흥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53점을 줬다. 사실상 낙제점수다. 현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인 흥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취임했다.

또 10명 중 5명 가량은 흥장관이 취임하면서 약속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 역할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단이 중소기업계 CEO 141명을 대상으로 취임 1년을 맞은 흥장관과 현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기부의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5일 내놓은 결과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1명 가운데 112명이 업무수행 만족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했고, 점수는 최저 0점부터 최고 95점까지 다양했다. 이 중 50점과 70점이 21명,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점(15명), 30점(13명), 40점(11명)도 10명

흥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평가 관련 설문조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141명 응답

지난 1년간 중소벤처기업부와 흥종학 장관이 잘한 일은?



흥종학 장관의 ‘중소기업 수호천사’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이상이었다. 평균은 53점으로 집계됐다.

흥장관은 취임하면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선 26%가 ‘다소 불만족’, 20%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6%가 ‘불만족’을 나타낸 것이다. 3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은 각각 13%, 4%였다.

지난 1년간 중기부와 조대 수장인 흥장관이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4%가 ‘잘한 일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 홍보’(18%), ‘중소기업과 소통’(16%), ‘중소기업 애로 청취 및 대변’·‘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11%)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흥장관 취임 후 추진된 정책들이 중소기업 경제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기여하지 않았다’(거의 미기여·전혀 미기여)가 46%로 가장 많았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34%였다. 반면 ‘기여했다’(매우 기여·다소 기여)는 20%에 그쳤다.

중기부 출범이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했다고 보는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 추진’과 ‘중소기업과 소통 원활’이 각각 10%로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141명 응답자 중 64%가 관련 항목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기여한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미흡하다고 보는 이유’에는 무응답율이 28%로 대조를 보였다. 미흡 이유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대응 미흡’이 39%로 가장 많았

다. 이외에 ‘중소기업을 위한 권의 대변 부족’과 ‘추진 정책들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보기 곤란’도 각각 13%, 12%였다.

‘중기부 출범 후 중소기업의 위상이나 아졌다고 보니’라는 질문엔 44%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다소 악화’(18%), ‘매우 악화’(17%), ‘약간 개선’(16%), ‘매우 개선’(5%)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141명 가운데 44명이 주관식인 ‘중기부와 흥장관에게 바라는 점’을 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1%가 답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

건의 내용에는 ▲중소기업과의 적극적 소통 ▲현장의 목소리 청취 ▲근본적 원인 개선을 위한 정책 실천 ▲중소기업 권리 대변 ▲소신있는 정책 집행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중소기업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현장 중심정책 실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이 두루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강원랜드 급 청렴도… ‘5등급’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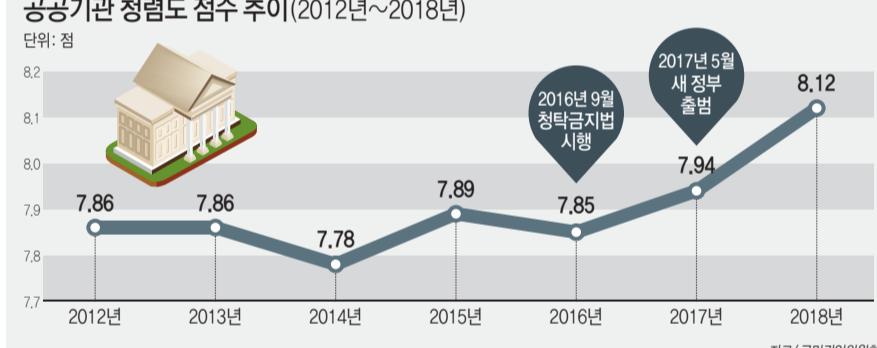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통계청·국민건강공단 등 1등급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강원랜드,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특히 중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3등급과 4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추락했다. 선수선발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채용비리 문제가 커진 강원랜드는 작년에도 5등급을 받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KT 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2018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 7.94점보다 0.18점 올랐고, 2016년(7.85점)부터 2년 연속 상승했다.

권익위는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유형별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강원랜드·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환경공단 ▲산림조합·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체육회·부산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이다.

또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서울디자인재단·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도 5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강릉시·원주시·양주시·경주시·구미시·문경시·영천시 ▲

고성군·횡성군·함양군·봉화군·울릉군·고흥군·완도군·장흥군 ▲광주광산구·대구 북구·부산 강서구·서울 광진구·서울 동작구가 5등급을 받았고, 광역자체는 5등급이 없다.

서울시교육청·대전시교육청·광주시 교육청도 5등급을 받았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산광역시, 경남사천시와 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예산군과 충북 음성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다.

권익위는 “작년보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경험률이 줄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승호 기자

금감원, 무자본 M&A 기업 회계 점검

점검 때 위반혐의 발견시 감리 실시

감독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이 하락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무자본 M&A 세력들은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회사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실제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갑’ 등(무자본 M&A 세력)은 전환사채

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종속회사 B에 대여하고, 이를 다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이번 점검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이들에 대해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발견됐거나 위반 가능성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